

시내면세점 설치하고 방탄소년단 광주 공연 추진

광주세계수영대회 정부 지원회의 무슨 얘기 오셨나

정부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밝히면서 북한의 대회 참가와 남북단일팀 구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영대회를 앞두고 케이팝(K-Pop) 스타를 활용한 한류콘서트 개최 등이 구체화 하면서 방탄소년단의 광주 공연 기대도 커지고 있다.

19일 광주시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위원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8월 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2019 광주 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과 각 부처 지원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북한 선수단 초청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대회에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출전권의 43%가 배정돼 있다. 북한 우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북한의 참가로 한반도와 세계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슬로건대로 '평화의 물결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5대 국제경기대회에 속한다"며 "이제 우리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5대

마케팅·입장권 단체구매 등 약속이 총리 "역대 최고대회 만들 것" 연예·체육계 인사 홍보대사로

국제대회를 모두 치르는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 우리는 하계올림픽, 월드컵, 육상선수권대회, 동계올림픽을 모두 성공적으로 열었다"며 "그 경험과 저력으로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도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개최도시인 광주시는 "오는 5월까지 경기장과 선수촌, 부대시설 등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회기간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확대하고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등 대중교통 수용능력을 높여준다고 소개했다.

이날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은 ▲법정부 차원의 대회 보조 및 마케팅 지원 ▲경기 단체관람 및 입장권 단체구매 협조 ▲북한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가 ▲폭염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교부세 70억원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조직위원장은 또 ▲인전국제공항과 광주송정역 간 직행KTX 임시편 편성 ▲문화

예술프로그램 지원 ▲대회운영 지원인력 지원 ▲공항·항만 출입국 지원 협조 ▲지자체 홍보관 설치 및 자치단체의날 운영 ▲한시적 시내면세점 설치 협조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 등도 요청했으며, 해당부처는 대부분 긍정적,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직위원장은 또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해주시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수영대회가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대회인 만큼 대회시설 건립, 경기 운영 및 관람 서비스 등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대회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케이팝 스타를 활용한 한류콘서트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특별전시공연프로그램 편성, 광주·호남권 관광코스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류콘서트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참여하는 방안이 최종 조율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앞으로 연예계, 체육계 등 각계각층의 분야별 홍보대사를 위촉해 대회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낙연 총리·오정해씨 홍보대사 임명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정부대표)와 오정해 씨(민간대표)가 각각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이용섭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장, 마스코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은 헌법 정신 근간...왜곡 처벌법 제정하라”

553개 시민단체 모인 시국회의 5·18 망언 의원 퇴출 기자회견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을 규탄하면서 이들의 의원직 제명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총 553개 단체로 이뤄진 '5·18 시국회의'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5·18 망언 3인 국회의원 퇴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5·18에 대한 왜곡과 망언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는 5·18을 모독하고 왜곡한 토론회 주최자인 김진태 의원, 5·18을 폭동으로 모독한 이종명 의원, 5·18 유공자를 괴물로 매도한 김순례 의원의 의원직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20일 오후 7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5·18 망언 의원 퇴출·한국당 규탄 2차 촛불집회'를 연다. 23일 오후 2시

에는 청계광장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5·18 망언 3인 국회의원 퇴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5·18 왜곡·편향력 강하게 규탄하며 전국 모든 학교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의를 전달인 국회에서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승고한 5·18의 역사를 왜곡·편향한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5·18정신과 민주주의 역사 발전을 부정한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국가 기념식이 열리고, 2011년에는 관련 자료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돼 국가·세계적으로 공인된 역사라고 협의회는 규정했다.

협의회는 "거룩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민주주의 역사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 학생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며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인 5·18민주화운동 계승을 위해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

다. 협의회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실과 정신을 바르게 교육하고, 관련 도서와 자료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YMCA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자유한국당 대국민 사과와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을 제명을 촉구했다. 광주YMCA는 "좌우를 떠나 5·18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왜곡하고 편향하는 망언을 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국가적 수치"라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과정과 소속 의원의 망언에 대한 대응 행태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YMCA는 "망언 국회의원 제명과 공식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20년 총선 낙선운동 등 시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문 대통령 “모든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영위가 포용국가 청사진”

과학기술보좌관 이공주 교수 새만금청장 김현숙 교수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포용국가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

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라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발표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릴 것 ▲차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일 것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할 것 등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안도 소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인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64) 이화여대 교수,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59)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3개 신사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광주시는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 인공지능(AI) 등 3개 신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오는 4월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등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정 대상은 에너지신산업(첨단과학산단), 친환경자동차(진곡산단), 인공지능(첨단3지구 등)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자는 기존 201개 법령 중 유예 또는 면제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이 시행된다. 기업들은 2년 동안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허가기준이 없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면 임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특구지정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운영한다. 또 20일까지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 인공지능 등 3개 사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해 특구지정계획을 수립한다. 광주시는 특구지정계획서를 바탕으로 6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사전컨설팅을 거쳐 7월 지역혁신협의회와 중기부 등에 사전 협의의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형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땅+건물+태양광 = 2년6개월(현금투자회수가능)
선로걱정없는 한국형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읍 잔여분 3기

2019년 10월 준공예정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